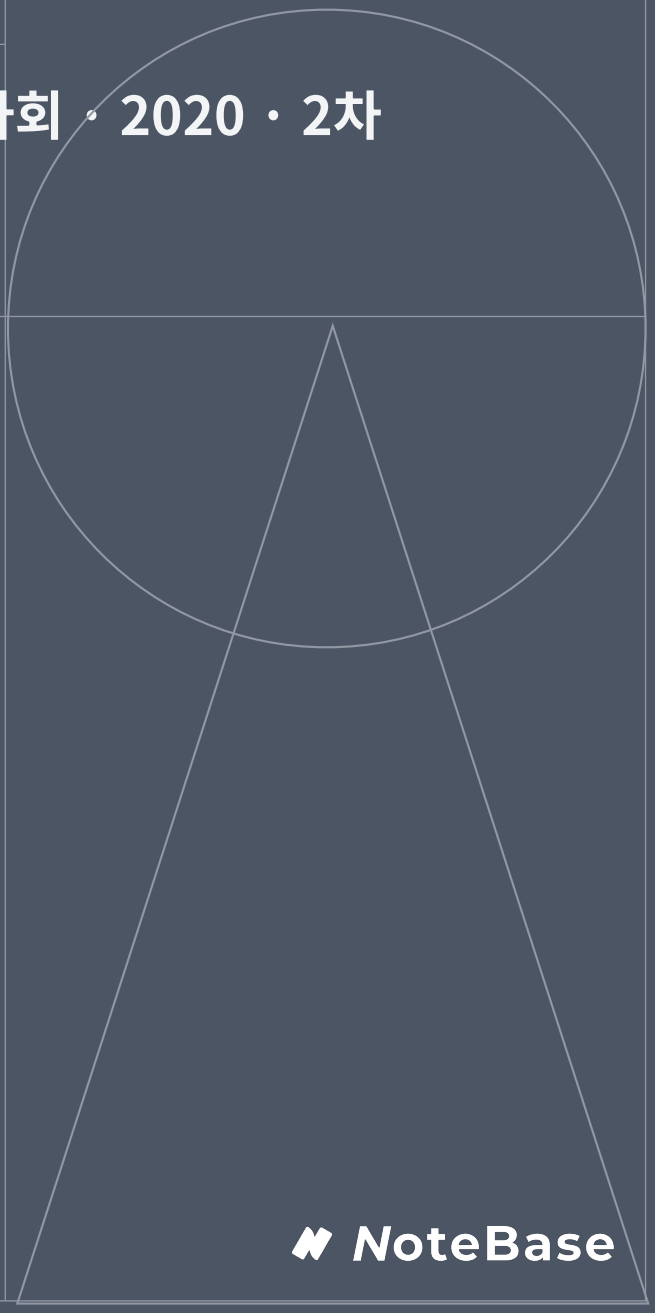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20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20 · 2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20 · 2차

문 1. 다음 <보기>는 생활 속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한 사례이다. 이에 대한 헌법 조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2007년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재외 국민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 제1항).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헌법 제6조 제2항).

③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

④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헌법 제4조).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이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는지 묻는다. 핵심은 선거권을 통해 국민이 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사에 참여한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찾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국민주권 =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원리이다. 선거권은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국가권력을 통제하여 국민주권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핵심 구분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정선거권 행사를 전면 배제하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통로가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도 2007년 재외국민 참정권 사건에서 선거권 행사를 국민주권 원리의 현실적 행사 수단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사례와 직접 연결되는 조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한 헌법 제1조 제2항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헌법 제34조 제1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한다.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를 보장한 사례의 직접적인 원리는 아니다.
틀린 연결: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올바른 연결: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 국민주권의 원리

② X
헌법 제6조 제2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보장하는 조항이다. 보기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므로 외국인이 아니다.
틀린 연결: 재외국민 → 외국인의 지위 보장
올바른 연결: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그 선거권 보장은 국민주권의 실현과 연결된다.

③ O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한다.

④ X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의 수립·추진을 규정한다. 보기에는 통일 정책이 아니라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이 제시되어 있다.
틀린 연결: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 평화통일의 원리
올바른 연결: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 국민주권의 원리

오답 포인트

②의 '외국인'과 보기의 '재외국민'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다. 또한 각 선지가 실제 헌법 조문과 일치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보기의 사례를 직접 설명하는 기본 원리인지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거권·참정권·대표자 선출·국가권력의 정당성에 관한 사례는 먼저 국민주권과 연결한다. 사회보장이나 인간다운 생활은 사회국가 원리,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 존중, 통일 정책은 평화통일의 원리와 연결하여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선거는 국민주권을 현실에서 행사하는 통로이다. 재외국민도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NoteBase

문 2. 다음 표는 A, B 두 정치 참여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구 분		A	B
공통점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 과정에 영향력 행사	
차이점	목적	자기 집단의 특정 이익 실현	정권 획득
	관심분야	특정 분야에서 특정 이익 추구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공익 추구

<보기>

㉠ A의 등장 배경으로는 이익의 다원화, 지역 대표성의 한계 등이 있다.

㉡ 우리나라에서 B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 A는 이해관계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

㉣ B는 정부와 의회를 연결함으로써 양자 간의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

㉤ A의 역기능 현상으로 핌피(PIMFY), 바나나(BANANA) 등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익 집단과 정당의 목적·활동 범위·정치적 책임을 구별하고, 정당 해산 제소의 주체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는 이익 집단이다. 이익 집단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B는 정당이다.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조직하고, 정부와 의회를 비롯한 정치 기구를 매개한다.

NoteBase

핵심 구분

㉠은 옳다. 이익의 다원화와 지역 대표만으로 다양한 직능·이익을 충분히 대표하기 어려운 한계는 이익 집단의 등장 배경이 된다.
㉡은 옳지 않다.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이다.
㉢은 옳지 않다. 이익 집단은 특정 이익을 추구하며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으므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다. 정치적 책임은 정권 획득과 운영을 추구하는 정당과 연결된다.
㉣은 옳다. 정당은 정부와 의회를 연결하여 양자 사이를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
㉤은 옳다. 핌피와 바나나는 집단의 특수 이익이나 지역 이익을 공익보다 앞세우는 현상으로, 이익 집단 정치의 역기능에 해당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 중 ㉠은 옳고 ㉢만 옳지 않으므로 부적절한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틀린 조합 '㉠㉢'은 '㉡㉢'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은 정당 해산 제소의 주체를 국회로 잘못 제시했고, ㉢은 이익 집단이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잘못 제시했다. 옳지 않은 설명은 ㉡과 ㉢뿐이다.
③ X — ㉡㉣ 중 ㉡은 옳지 않지만 ㉣은 정당의 매개 기능을 설명한 옳은 진술이며, 옳지 않은 ㉢이 빠져 있다. 틀린 조합 '㉡㉣'은 '㉡㉢'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과 ㉤은 모두 옳은 진술이고, 옳지 않은 ㉡과 ㉢이 빠져 있다. 틀린 조합 '㉣㉤'은 '㉡㉢'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공통점만 보고 이익 집단도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익 집단은 특정 이익의 실현이 목적이고, 정당은 정권 획득과 운영이 목적이다. 또한 위헌정당 해산의 제소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정 이익·한정된 관심 분야이면 이익 집단, 정권 획득·광범위한 공익·정치적 책임이면 정당으로 구별한다. 위헌정당 해산은 '정부가 제소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는 주체와 절차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이익 집단은 특정 이익과 영향력 행사, 정당은 정권 획득과 정치적 책임이다. 위헌정당 해산은 정부 제소, 헌법재판소 심판이다.

NoteBase

문 3. '자유무역협정(FTA)', '교토의정서'와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체결·공포한 경우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 원칙이다.
㉢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 형식의 합의다.
㉣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교토의정서가 조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조약의 개념·국내적 효력·구속 범위를 다른 국제법의 법원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조약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법적 권리와 의무를 만들기 위하여 서면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합의이다. 법률의 일반원칙은 여러 국가의 국내법 체계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보편적인 법 원칙으로서 조약과는 별개의 국제법의 법원이다.

핵심 구분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그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비준하고 공포되어야 한다. 반면 조약의 국제적 구속력은 원칙적으로 당사국에 미치며, 동의하지 않은 제3국에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과 ㉢은 옳고, ㉡과 ㉣은 옳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과 ㉢을 고른 조합이다. ㉠은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의 국내적 효력을 설명하고, ㉢은 조약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므로 모두 옳다.
② X — ㉢은 옳지만 ㉡은 조약이 아니라 법률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이며, 옳은 ㉠도 빠져 있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
③ X — ㉡은 법률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이고, ㉣도 조약이 모든 국가를 당연히 구속한다고 하므로 틀리다. 조약은 원칙적으로 그 당사국만을 구속한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
④ X — ㉢은 옳지만 ㉣의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가 틀렸고, 옳은 ㉠도 빠져 있다. 조약은 원칙적으로 당사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

오답 포인트

㉡의 '보편적 원칙'이라는 표현을 조약의 일반적 성격으로 오해하기 쉽다. 또한 ㉣은 국제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고 범위를 넓힌 함정이다. 조약과 법률의 일반원칙은 서로 다른 법원이며, 조약은 원칙적으로 당사국만을 구속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면 형식의 합의·당사국의 법적 구속'은 조약, '각국 법체계에 공통으로 인정되는 보편적 원칙'은 법률의 일반원칙으로 구분한다. 조약의 효력 범위가 나오면 '모든 국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당사국'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조약은 서면 합의, 국내에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국제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국만 구속한다.

NoteBase

문 4. 다음은 정치의 의미에 대한 대화 내용이다. 甲과 乙의 관점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甲: 난 사회적 희소가치 배분을 둘러싼 권력 현상은 국가 수준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의 활동을 정치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
乙: 내 생각으로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집단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 자체를 정치라고 봐.
<보기>
㉠ 甲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乙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甲과 乙의 관점 모두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국정을 관리하는 활동을 정치로 본다.
㉣ 甲의 관점은 乙의 관점과는 달리 다양한 갈등의 해결을 정치로 본다.
㉤ 乙의 관점은 개인 간, 사회 집단 간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치를 국가의 활동으로 한정하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모든 사회집단의 이해관계 조정 과정으로 보는 넓은 의미의 정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甲의 관점은 좁은 의미의 정치이다. 정치를 국가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으로 한정하며, 키워드는 국가와 정부이다.
乙의 관점은 넓은 의미의 정치이다. 정치를 국가뿐 아니라 개인과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모든 과정으로 보며, 키워드는 모든 사회집단이다.
따라서 ㉠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틀리고, ㉡은 맞다. 정부의 정책 수립과 국정 관리는 두 관점 모두 정치에 포함하므로 ㉢은 맞다. 갈등 해결을 甲만 정치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은 틀리고, 개인·집단 간 의사 결정까지 설명하는 ㉤은 맞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은 맞지만 ㉠과 ㉣이 틀리므로 적절한 설명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의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는 표현은 틀렸으며, 실제로 甲의 관점은 국가 수준에 정치를 한정하므로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의 '甲의 관점은 乙의 관점과는 달리'라는 표현도 틀렸으며, 실제로 두 관점 모두 갈등 해결을 정치로 본다.
② X — ㉡과 ㉢은 맞지만 ㉣이 틀리므로 적절한 설명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은 '甲의 관점만 다양한 갈등의 해결을 정치로 본다'가 아니라 '甲과 乙의 관점 모두 갈등의 해결을 정치로 본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은 넓은 의미의 정치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므로 맞다. ㉢은 정부의 정책 수립과 국정 관리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정치에 모두 포함되므로 맞다. ㉤은 넓은 의미의 정치가 개인 간·사회 집단 간 의사 결정 과정까지 포괄하므로 맞다.
④ X — ㉤은 맞지만 ㉠과 ㉣이 틀리므로 적절한 설명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은 '적합하다'가 아니라 '적합하지 않다'로 고쳐야 하고, ㉣은 甲과 乙 모두 다양한 갈등의 해결을 정치로 본다고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에서 '모두'라는 말 때문에 오답으로 판단하기 쉽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밖의 생활 영역까지 정치의 범위를 확장할 뿐, 정부의 정책 수립과 국정 관리를 정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또한 ㉣은 갈등 해결이라는 공통점을 마치 甲만의 특징인 것처럼 바꾼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치의 주체와 범위를 기준으로 구별한다. 국가·정부의 활동에 한정하면 좁은 의미이고, 개인과 모든 사회집단의 이해관계 조정까지 포함하면 넓은 의미이다. 넓은 의미는 좁은 의미의 국가 활동을 포함한다.

암기 포인트

좁은 의미는 국가 중심, 넓은 의미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집단의 이해관계 조정이다.

NoteBase

문 5. 다음 글에서 (㉠)에 해당하는 헌법의 기본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사랑은 반드시 상대방의 성(姓)과 본(本)을 확인하고 나서 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동성동본이면 합법적인 결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지속해 온 관행이자 「민법」에도 규정되었던 동성동본 혼인 금지는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2005년 「민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동성동본 혼인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 '혼인의 자유와 혼인할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동성동본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규정은 국민의 (㉠)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에 '일반적 행동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 결정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① 행복추구권

② 평등권

③ 자유권

④ 사회권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혼인의 자유와 혼인 상대방을 결정할 자유의 헌법상 근거를 묻는다. 핵심은 지문에 제시된 일반적 행동자유권·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자기결정권이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된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포괄적 기본권이다. 여기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 등이 도출된다.

핵심 구분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구 민법 조항에 관하여 혼인의 자유와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행복추구권과 관련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평등권도 해당 결정의 판단 근거가 되었지만, 지문처럼 일반적 행동자유권·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자기결정권을 포함하는 기본권을 묻는 빈칸에는 행복추구권이 들어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이 포함되며 혼인의 자유와 혼인 상대방을 결정할 자유도 이와 관련된다. 따라서 지문의 (㉠)에 해당한다.
② X —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권이다.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평등원칙과도 관련되지만, 지문이 열거한 자유들을 포괄하는 권리는 평등권이 아니다. 틀린 표현: 평등권 → 올바른 표현: 행복추구권.
③ X — 자유권은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을 묶어 부르는 기본권의 유형이므로, 지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헌법상 권리명이 아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은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된다. 틀린 표현: 자유권 → 올바른 표현: 행복추구권.
④ X — 사회권은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적극적 급부나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권리로, 혼인 상대방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의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다. 틀린 표현: 사회권 → 올바른 표현: 행복추구권.

오답 포인트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남녀 차별의 문제도 일으켰다는 점 때문에 ② 평등권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빈칸 문제에서는 결정에 함께 등장한 모든 기본권이 아니라, 지문이 직접 열거한 일반적 행동자유권·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자기결정권의 모권리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함께 나오면 이를 포괄하는 행복추구권을 먼저 연결한다. 차별 취급의 합리성 여부를 묻는 경우에 평등권을 검토하고, 국가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사회권을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자기결정·개성 발현을 포괄하며, 혼인 상대방 선택의 자유와 연결된다.

NoteBase

문 6.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 변호사, 경찰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③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④ 피고인이 희망하면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사람, 배심원 평결의 효력,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를 평결하고 유죄인 경우 양형 의견을 내는 제도이다. 기속한다는 것은 법원이 그 판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핵심 구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지만, 일정한 결격사유·직업상 제외사유 등이 있는 사람은 선정될 수 없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이 존중할 대상이지만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대상사건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원칙적으로 그 절차로 진행하지만, 법원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20 · 2차

선지별 해설

① X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정 연령은 만 20세 이상이며, 결격사유·직업상 제외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틀린 표현: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올바른 표현: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법정 제외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② O
지방의회의원, 변호사, 경찰공무원은 법률이 정한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③ X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재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도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틀린 표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올바른 표현: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존중하지만 이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④ X
대상사건에서 피고인이 희망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틀린 표현: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
올바른 표현: '피고인이 희망하면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되,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으면 진행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①의 성년 연령인 만 19세와 배심원 자격 연령인 만 20세를 혼동하거나, ③의 '존중'과 '기속'을 같은 뜻으로 보면 틀리기 쉽다. 또한 ④의 피고인 신청 원칙에도 법원의 배제결정이라는 예외가 있음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민참여재판 선지는 배심원 자격·제외사유·평결의 효력·절차 개시의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 판단한다.
'누구나', '반드시' 같은 단정 표현이 있으면 법정 제외사유나 배제결정의 존재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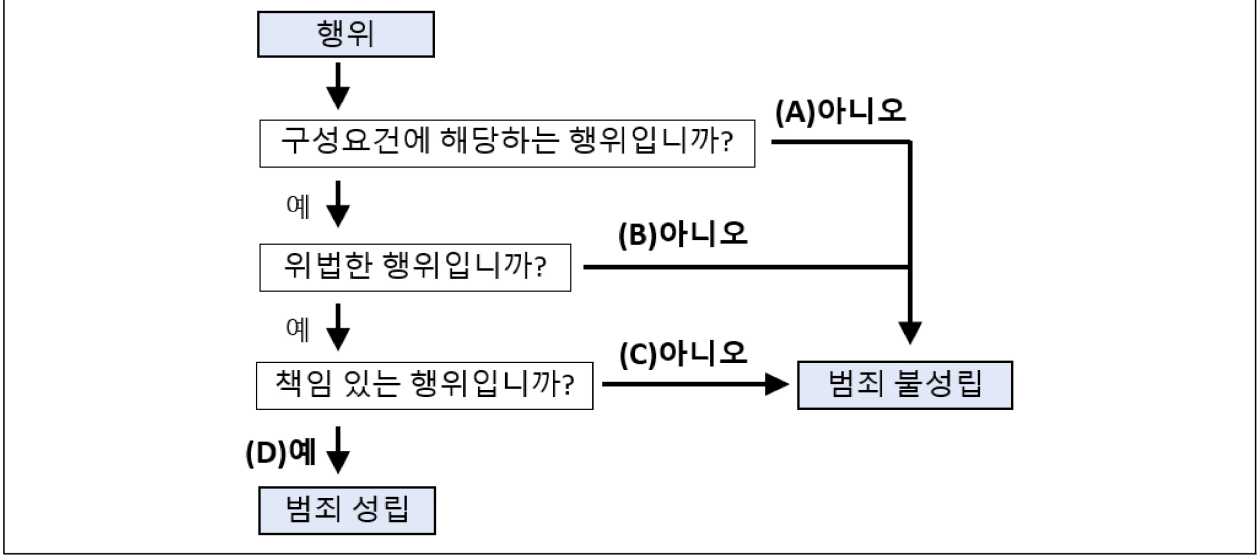
암기 포인트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특정 직업은 제외, 평결은 비기속, 피고인의 희망은 원칙이지만 법원의 배제결정은 예외이다.

NoteBase

문 7. 다음 <그림>은 범죄 성립의 3요소를 나타낸다. <그림> (A)~(D)와 <보기> (가)~(라)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그 림>



<보기>

(가) 12세인 甲은 학원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실수로 가져왔다.

(나) 乙은 아들의 생명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고 불가피하게 회사의 주요 기밀문서를 상대 회사에 넘겼다.

(다) 눈 내리는 새벽, 과속으로 운전하던 丙은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다.

(라) 길에 서 있던 丁은 자신에게 돌진하는 브레이크 풀린 자동차를 피하려고 인근 휴대폰 매장으로 뛰어들어가다 진열된 고가의 핸드폰을 파손했다.

① (가) - (A)

② (나) - (C)

③ (다) - (D)

④ (라) - (C)

정답 4번

쟁점

범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차례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각 사례가 어느 단계에서 범죄 성립이 막히는지, 또는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하는지를 묻는다.

NoteBase

사례 정리

(가)는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기 우산으로 잘못 알고 가져간 경우이다.
(나)는 아들의 생명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협박 때문에 기밀문서를 넘긴 경우이다.
(다)는 눈길에서 과속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과실행위이다.
(라)는 돌진하는 자동차를 피하려다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긴급피난 사례이다.

용어 풀이

구성요건 해당성은 행위가 법률이 정한 범죄의 유형에 들어맞는다는 뜻이다. 위법성은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어긋난다는 뜻이며, 긴급피난과 같은 정당화 사유가 있으면 조각된다. 책임은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는 뜻이며, 형사미성년이나 강요된 행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조각된다.

핵심 구분

도식의 (A)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B)는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C)는 책임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D)는 세 요소가 모두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고, 방어할 방법이 없는 생명·신체 위해의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를 벌하지 않으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긴급피난도 벌하지 않는다. 또한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처벌 규정이 있을 때 처벌하고,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에는 처벌 규정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는 타인의 우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실수로 가져갔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절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와 연결할 수 있다. 甲이 12세라는 사실은 별도로 책임 단계에서도 범죄 성립을 막지만, 이 사례에서는 먼저 고의가 없어 구성요건 단계에서 걸러진다.
② O — (나)는 친족인 아들의 생명을 해치겠다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는 협박 때문에 강요된 행위이다. 행위 자체의 위법성보다 乙에게 적법한 행위를 기대하여 비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책임이 조각되는 (C)와 연결된다.
③ O — (다)는 눈길에서 과속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가 인정된다.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丙의 과실과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는 (D)와 연결된다.
④ X — (라)는 돌진하는 자동차라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의 휴대폰을 파손한 경우이다. 상당성이 인정되는 긴급피난은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C)가 아니라 (B)에 연결해야 한다. 틀린 표현: ‘(라) - (C)’ → 올바른 표현: ‘(라) - (B)’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긴급피난을 ‘어쩔 수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 (C)로 고르기 쉽다. 그러나 긴급피난은 행위자의 비난 가능성을 없애는 책임조각사유가 아니라, 상당한 피난행위를 법질서가 허용하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정당방위·긴급피난처럼 행위를 허용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나이·강요 등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구성요건 불해당 → 위법성 조각 → 책임 조각의 순서로 대입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실수로 고의 없음은 구성요건, 긴급피난은 위법성, 형사미성년·강요된 행위는 책임 단계이다.

NoteBase

문 8. 국내 총생산(GDP)과 국민 총생산(GN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GNP에 비해 GDP는 국내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 수준을 파악하기에 유용하다.

②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수의 국내 TV 출연료는 GDP에는 포함되나 GN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작년에 생산된 자동차를 올해 중고차로 구입했다면 이는 올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A국의 1인당 GDP가 B국의 1인당 GDP보다 크다면, A국이 B국보다 소득 분배가 더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GDP와 GNP의 구분 기준, 중고품 거래의 처리, 1인당 GDP와 소득 분배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GDP(국내 총생산)는 일정 기간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로, 생산 장소가 기준이다.
GNP(국민 총생산)는 일정 기간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로, 생산 주체가 기준이다.
1인당 GDP는 GDP를 인구로 나눈 평균값일 뿐, 개인 간 소득 분배의 평등 정도를 보여 주는 지표는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GDP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생산을 합산하므로 국내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 수준을 파악하는 데 GNP보다 유용하다.
② O. 외국인 가수가 국내에서 제공한 공연·방송 서비스의 대가는 국내 생산이므로 GDP에는 포함되지만, 자국 국민의 생산이 아니므로 GN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O. 작년에 생산된 자동차의 가치는 작년 GDP에 이미 반영되었다. 올해 이루어진 중고차 자체의 거래는 올해 새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올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X. 틀린 부분은 '1인당 GDP가 더 크면 소득 분배가 더 평등하다'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1인당 GDP가 더 크다는 사실은 평균적인 생산·소득 수준이 더 높다는 뜻일 뿐이며, 소득 분배의 평등 정도는 별도의 분배 지표로 판단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평균 수준과 분배 상태를 같은 것으로 보는 함정이다. 같은 1인당 GDP를 가진 국가라도 소득이 소수에게 집중되었는지 고르게 분배되었는지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GDP와 GNP는 각각 '국내에서 생산했는가'와 '국민이 생산했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GDP 포함 여부는 해당 기간에 새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인지 확인하고, 1인당 지표만으로 분배 상태를 추론하지 않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GDP는 장소, GNP는 생산 주체, 1인당 GDP는 평균이지 분배가 아니다.

NoteBase

문 9. 다음 표는 甲기업의 X재 생산에 따른 평균 비용과 이윤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생산된 X재는 모두 판매되며, 평균 수입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생산량(개)	1	2	3	4	5
평균 비용(만원)	12	11	10	9	10
이윤(만원)	0	2	(가)	(나)	(다)

* 평균수입 $= \frac{\text{총수입}}{\text{생산량}}$, 평균비용 $= \frac{\text{총비용}}{\text{생산량}}$

①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X재의 시장 가격은 상승한다.

② 4개를 생산하는 것보다 3개를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생산량을 1개씩 늘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감소한다.

④ (다)의 값은 (가)의 값보다 크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평균 수입·평균 비용으로 총수입과 총비용을 구한 뒤 이윤과 한계 비용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생산량 1개일 때 평균 비용은 12만원이고 이윤은 0원이므로 총수입과 총비용이 모두 12만원이다. 따라서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평균 수입은 12만원이고, X재의 시장 가격도 12만원으로 일정하다.

사용할 공식

$TR = AR \times Q$

$TC = AC \times Q$

$\pi = TR - TC$

$MC = \Delta TC / \Delta Q$

평균 수입과 평균 비용은 각각 생산량 1개당 수입과 비용이므로 생산량을 곱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구한다.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값이며, 한계 비용은 생산량을 추가로 1개 늘릴 때의 총비용 증가분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생산량 1개에서 이윤이 0원이므로 평균 수입은 12만원이다. 따라서 생산량이 1~5개일 때 총수입은 각각 12만원, 24만원, 36만원, 48만원, 60만원이다.
2. 평균 비용에 생산량을 곱하면 총비용은 각각 12만원, 22만원, 30만원, 36만원, 50만원이다.
3.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면 이윤은 각각 0원, 2만원, 6만원, 12만원, 10만원이다. 따라서 (가)=6만원, (나)=12만원, (다)=10만원이다.
4. 총비용 증가분으로 본 한계 비용은 생산량을 1개에서 2개, 2개에서 3개, 3개에서 4개, 4개에서 5개로 늘릴 때 각각 10만원, 8만원, 6만원, 14만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평균 수입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12만원으로 일정하고, 이는 X재의 시장 가격과 같다. 틀린 표현인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시장 가격은 상승한다'는 '생산량이 증가해도 시장 가격은 일정하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3개 생산 시 이윤은 6만원이고 4개 생산 시 이윤은 12만원이므로 4개를 생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3개를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4개를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한계 비용은 10만원, 8만원, 6만원으로 감소하다가 다섯 번째 재화를 생산할 때 14만원으로 증가한다. '1개씩 늘릴 때마다 감소한다'는 '4개까지는 감소하지만 5개로 늘릴 때 증가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다)는 10만원이고 (가)는 6만원이므로 (다)의 값이 (가)의 값보다 크다.

오답 포인트

평균 비용의 감소를 추가 생산 비용의 계속된 감소로 오해하기 쉽다.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 자체가 아니라 총비용의 증가분으로 구해야 한다. 또한 평균 수입이 일정하다는 조건은 시장 가격이 생산량과 무관하게 일정하다는 뜻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평균값에 생산량을 곱해 총량으로 바꾼 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 이윤을 구하고 총비용의 인접 생산량 간 차이로 한계 비용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평균×생산량=총량, 이윤=총수입-총비용, 한계 비용=총비용 증가분이다.

NoteBase

문 10. 재화 및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A, B, C, D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구분		경합성	
		있다	없다
배제성	있다	A	B
	없다	C	D

<보기>

㉠ 무임승차 문제는 C보다 B에 해당하는 재화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 D에 비해 C에 해당하는 재화에서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에 의한 고갈 위험이 높다.

㉢ 무료 공영주차장과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영화파일은 C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 정부의 재원이 부족한 경우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여 D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기도 한다.

㉤ D에 해당하는 재화의 특성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배제성과 경합성의 유무에 따라 재화를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 자원, 공공재로 구분하고 각 재화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배제성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이고, 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줄이는 성질이다.

A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사적 재화이다.

B는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이 없는 클럽재이다.

C는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있는 공유 자원이다.

D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공공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 X — 무임승차는 이용자를 배제하기 어려울 때 발생하므로 배제성이 있는 B보다 배제성이 없는 C나 D에서 나타나기 쉽다. 틀린 표현은 'C보다 B에서 더 많이'이며, 올바르게는 'B보다 C에서 더 많이'이다.
㉡ O — C는 비배제적이면서 경합적인 공유 자원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량을 줄이므로, 비경합적인 D보다 과잉 사용과 고갈 위험이 크다.
㉢ X — 무료 공영주차장은 이용 공간이 한정되어 경합성이 있고 이용자를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C의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영화 파일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있고 추가 이용자의 소비가 다른 이용자의 소비를 줄이지 않으므로 B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두 사례가 모두 C라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무료 공영주차장은 C,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영화 파일은 B의 사례'이다.
㉣ O — D는 공공재이다. 정부의 재정만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투자사업과 같이 민간 사업자가 공공재 공급에 참여할 수 있다.
㉤ O — D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하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으므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① X — ㉠과 ㉢이 틀렸으므로 '㉠㉡㉢'은 적절한 진술의 조합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이다.
② X — ㉠이 틀렸으므로 '㉠㉡㉣'은 적절한 진술의 조합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이다.
③ O — ㉡, ㉣, ㉤은 모두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다.
④ X — ㉢이 틀렸으므로 '㉢㉣㉤'은 적절한 진술의 조합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이다.

오답 포인트

㉠은 무임승차를 경합성과 연결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무임승차의 직접 기준은 배제성이고, 고갈 위험의 직접 기준은 경합성이다. 또한 ㉢에서는 디지털 영화 파일이 경합적이지 않더라도 유료 구매로 이용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재화의 배제성과 경합성을 각각 판정한다. 그다음 비배제성은 무임승차, 경합성은 과잉 사용과 고갈 위험으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A 사적 재화, B 클럽재, C 공유 자원, D 공공재이다. 비배제성은 무임승차, 경합성은 고갈 위험과 연결된다.

NoteBase

문 11.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할 경우,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재할인율을 인하할 수 있다.

②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정부는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

③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자 재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한국은행도 정부의 재정 정책에 발맞추어 지급 준비율 인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려 할 경우, 한국은행은 국공채를 매입할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경기와 물가 상황에 따라 긴축 정책과 확장 정책의 수단을 올바르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긴축 정책은 물가 상승이나 초과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총수요와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이다. 정부 지출 감소·세율 인상, 재할인율 인상·지급 준비율 인상·국공채 매각이 이에 해당한다.
확장 정책은 경기 침체와 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총수요와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다. 정부 지출 증가·세율 인하, 재할인율 인하·지급 준비율 인하·국공채 매입이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을 낮추려면 긴축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틀린 표현은 '재할인율을 인하'이다. 재할인율 인하는 통화량과 총수요를 늘리는 확장 수단이므로, 물가 억제를 위해서는 재할인율을 인상한다고 고쳐야 한다.
② O —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 지출 감소와 세율 인상은 총수요를 줄이는 긴축 재정 정책이므로 적절하다.
③ O — 코로나19로 실업이 늘고 소비가 감소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수입보다 늘리는 적자 재정 정책으로 총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지급 준비율 인하도 은행의 대출 여력을 키워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 통화 정책이므로 적절하다.
④ O — 한국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면 시중에 통화가 공급되고 이자율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국내 총생산 감소'만 보고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선지가 제시한 정책 목표는 물가 상승률 억제이므로 재할인율의 방향은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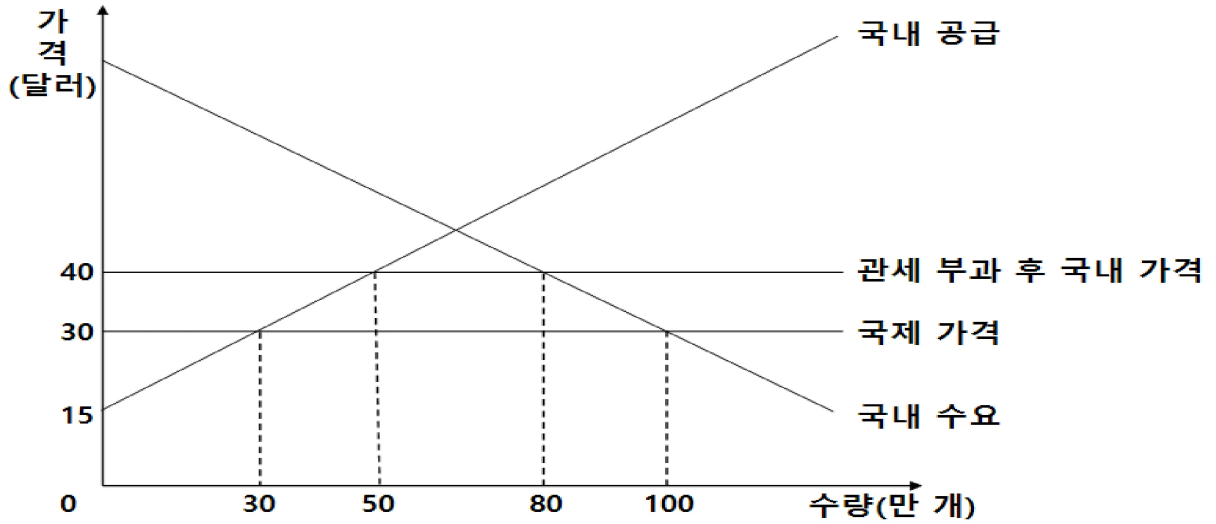
먼저 정책 목표가 경기 부양인지 물가 억제인지 확인한다. 경기 부양이면 정부 지출 증가·세율 인하·지급 준비율 인하·재할인율 인하·국공채 매입을, 물가 억제이면 그 반대 방향을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매입·인하·지출 확대는 확장, 매각·인상·지출 축소는 긴축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그림은 관세 부과에 따른 甲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甲국은 국제 가격에 개당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여 X재를 수입하고 있다. X재의 국제 가격은 일정하며, 이 가격에서 X재를 무제한 수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언급되지 않은 다른 조건은 변함이 없다.)



① 관세 부과 후 국내 생산량은 50만 개이다.

② 관세를 부과하면 경상 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③ 관세 부과 후 甲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300만 달러이다.

④ 관세 부과 전에 비해 관세 부과 후 생산자 잉여는 625만 달러만큼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는 900만 달러만큼 감소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관세 부과 전후의 국내 생산량·소비량·수입량을 그래프에서 읽고, 관세 수입과 생산자·소비자 잉여의 변화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국제 가격은 30달러이고 관세는 개당 10달러이므로 관세 부과 후 국내 가격은 40달러이다.
관세 부과 전에는 국내 생산량 30만 개, 국내 소비량 100만 개이므로 수입량은 70만 개이다.
관세 부과 후에는 국내 생산량 50만 개, 국내 소비량 80만 개이므로 수입량은 30만 개이다.
공급곡선의 가격축 절편은 15달러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수입량은 $M = Q_d - Q_s$이다.
관세 수입은 $TR = t \times M$이다.
생산자 잉여 증가분은 가격 상승으로 생기는 직사각형과 생산 증가분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합하여 구한다.
소비자 잉여 감소분은 가격 상승으로 생기는 직사각형과 소비 감소분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합하여 구한다.

계산 과정

1. 관세 부과 후 수입량은 80만 개-50만 개=30만 개이다.
2. 정부의 관세 수입은 10달러×30만 개=300만 달러이다.
3. 생산자 잉여 증가분은 30만 개×10달러+$\frac{1}{2}$×20만 개×10달러=400만 달러이다. 관세 부과 후 생산자 잉여의 총액은 $\frac{1}{2}$×(40달러-15달러)×50만 개=625만 달러이다.
4. 소비자 잉여 감소분은 80만 개×10달러+$\frac{1}{2}$×20만 개×10달러=900만 달러이다.

선지 판단

① O. 관세 부과 후 국내 가격 40달러에서 국내 공급량은 50만 개이므로 국내 생산량은 50만 개이다.
② O. 관세 부과로 수입량이 70만 개에서 30만 개로 감소하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상품 수입액을 줄여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③ O. 관세 부과 후 수입량은 30만 개이므로 정부의 관세 수입은 10달러×30만 개=300만 달러이다.
④ X. '생산자 잉여는 625만 달러만큼 증가'가 틀렸다. 625만 달러는 관세 부과 후 생산자 잉여의 총액이며, 증가분은 625만 달러-225만 달러=400만 달러이다. 소비자 잉여가 900만 달러 감소한다는 부분은 옳다. 따라서 올바르게는 '생산자 잉여는 400만 달러만큼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는 900만 달러만큼 감소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관세 부과 후 생산자 잉여의 총액 625만 달러를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으로 바꿔 제시한 선지이다. '부과 후의 총액'과 '부과 전후의 변화량'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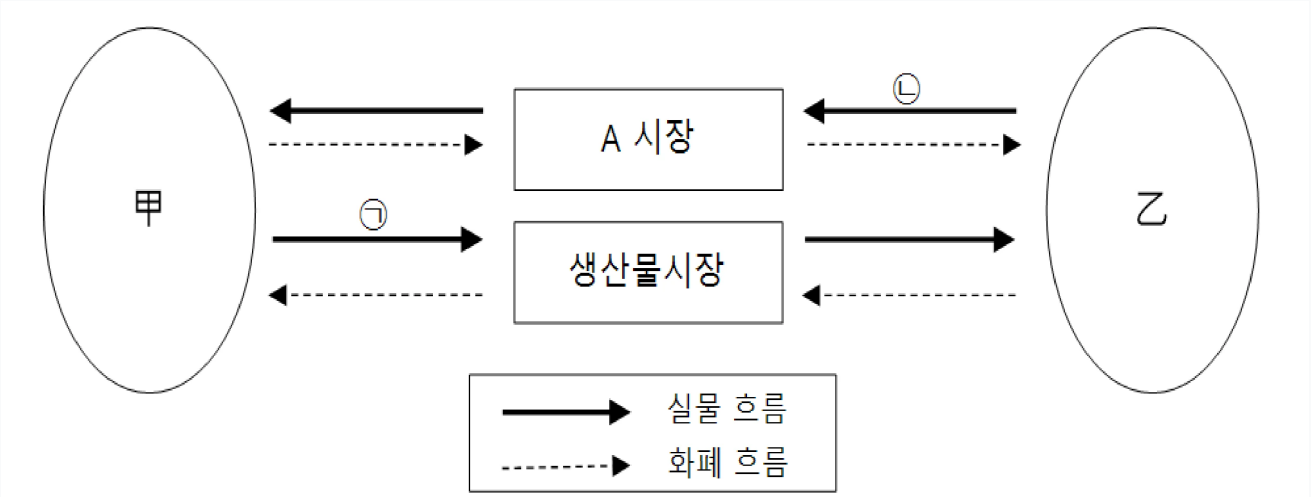
먼저 각 가격선과 수요·공급곡선의 교점에서 생산량과 소비량을 읽고, 수입량은 소비량에서 생산량을 빼서 구한다. 그다음 관세 수입은 관세액×관세 부과 후 수입량으로 계산하고, 잉여의 변화는 부과 전후 넓이의 차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관세 부과 시 국내 가격은 오르고 국내 생산은 증가하며 국내 소비와 수입은 감소한다. 관세 수입은 관세액×수입량이고, 잉여의 총액과 증가·감소분은 서로 다른 값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그림은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甲과 乙은 경제 주체이다.)



① 甲은 A 시장에서는 공급자이며,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이다.

② 乙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경제 활동을 한다.

③ A 시장에서 임금과 이자가 결정된다.

④ ㉠은 토지와 자본 등에 해당하며, ㉡은 재화와 서비스에 해당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실물 흐름의 화살표를 따라 경제 주체와 시장을 식별하는 문제이다. 생산물이 甲에서 생산물 시장을 거쳐 乙로 이동하므로 甲은 기업, 乙은 가계이며, 생산 요소가 乙에서 A 시장을 거쳐 甲으로 이동하므로 A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甲은 A 시장인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노동·토지·자본을 구입하는 수요자이고, 생산물 시장에서는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공급자이다. 틀린 표현인 'A 시장에서는 공급자이며,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는 'A 시장에서는 수요자이며,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로 고쳐야 한다.

② X — 乙은 가계이므로 생산 요소를 제공해 소득을 얻고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여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이윤 극대화'는 기업인 甲의 경제 활동에 해당한다.

③ O — A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다.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자본의 대가인 이자가 이 시장에서 결정된다.

④ X — ㉠은 甲에서 생산물 시장으로 이동하는 실물인 재화와 서비스이고, ㉡은 乙에서 A 시장으로 이동하는 실물인 노동·토지·자본 등의 생산 요소이다. 따라서 '㉠은 토지와 자본, ㉡은 재화와 서비스'는 서로 반대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실선과 점선을 혼동하거나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읽기 쉽다. 실선은 실물 흐름이므로 생산물 시장으로 재화를 보내는 甲이 기업이고, A 시장으로 생산 요소를 보내는 乙이 가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생산물 시장의 실물 화살표를 본다. 재화와 서비스를 보내는 쪽은 기업, 받는 쪽은 가계이다. 그다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계가 공급자, 기업이 수요자이며, 화폐 흐름은 실물 흐름과 반대 방향이라는 점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생산물 시장은 기업 공급·가계 수요, 생산 요소 시장은 가계 공급·기업 수요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가)~(바)는 어떤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 과정을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에 대하여 폭력적 게임 노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나) 청소년들이 폭력적 게임에 많이 노출될수록 공격적 행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다) 폭력적 게임 노출 정도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폭력적 게임을 하는 데 사용하는가를 5점 척도로 나타내고, 공격적 행동 정도는 타인을 비난하는 말과 가해 행동을 한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는가를 5점 척도로 나타낸다.
(라)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남녀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질문지를 만들어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마) 자료 분석 결과 폭력적 게임 노출 정도와 공격적 행동 정도 사이에 높은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된다.
(바)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폭력적 게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보기>
㉠ (가)와 (바)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 (나)에서 폭력적 게임 노출 정도는 독립 변인이고, 공격적 행동 정도는 종속 변인이다.
㉢ (다)에서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진다.
㉣ (라)에서 채택한 조사방법은 행위자의 동기를 깊이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 (마)에서 만약에 가설이 기각되었다면 그 연구는 과학적 연구가 아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사회·문화 현상의 양적 연구 과정에서 가치 개입 가능 단계, 독립·종속 변인, 조작적 정의, 질문지법의 특징, 가설 검증의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가치 개입: 연구 주제 선정이나 결과의 활용처럼 연구자가 무엇을 연구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를 정하는 단계에는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독립 변인은 원인으로 설정한 변인이고, 종속 변인은 그 영향을 받아 변하는 결과 변인이다.
조작적 정의: 추상적 개념을 실제로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로 바꾸는 것이다.
질문지법: 표준화된 문항으로 많은 사람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유리하지만 행위자의 동기를 깊이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가설 검증: 가설이 기각되어도 과학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검증했다면 과학적 연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 ㉡, ㉢이 모두 옳다. (가)의 연구 주제 선정과 (바)의 정책 제안에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고, (나)에서 폭력적 게임 노출 정도는 원인인 독립 변인, 공격적 행동 정도는 결과인 종속 변인이다. 또한 (다)는 두 변인을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구체화했으므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② X — ㉤이 틀리고 ㉢이 빠져 있다. 틀린 표현은 '가설이 기각되었다면 그 연구는 과학적 연구가 아니다'이다. 올바르게는 가설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과학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검증했다면 과학적 연구이며, (다)의 측정 지표 설정은 조작적 정의이다.
③ X — ㉣이 틀리고 ㉠이 빠져 있다. 틀린 표현은 질문지법이 '행위자의 동기를 깊이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질문지법은 다수의 응답을 표준화하여 수집하는 데 유용하고, 동기를 깊이 이해하려면 면접법이나 참여 관찰법과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이 더 적합하다. 또한 (가)와 (바)에는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④ X — ㉣과 ㉤이 모두 틀리고 ㉠과 ㉡이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질문지법은 심층적 동기 이해보다 표준화된 자료 수집에 적합하고, 가설이 기각되어도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한 연구는 과학적 연구이다. (가)·(바)의 가치 개입 가능성과 (나)의 독립·종속 변인 구분은 모두 옳다.

오답 포인트

가설이 기각되면 연구가 실패하거나 비과학적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과학성은 가설의 채택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검증했는지로 판단한다. 또한 표준화된 질문지법과 심층 이해에 유리한 질적 연구 방법을 바꾸어 제시한 ㉣에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구 목적·주제 선정과 결과 활용은 가치 개입 가능 단계로, 가설 설정부터 자료 수집·분석과 결론 도출은 객관성이 요구되는 단계로 구분한다. 이어 '원인=독립 변인, 결과=종속 변인', '측정 지표로 바꿈=조작적 정의', '표준화·대규모=질문지법'의 기준을 적용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주제·활용에는 가치 개입, 원인은 독립 변인, 결과는 종속 변인, 측정 가능하게 바꾸면 조작적 정의이다. 가설 기각도 과학적 검증의 결과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가)와 (나)는 사회를 바라보는 상이한 이론적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사회는 상호 연관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지며, 이 구성 요소들은 사회 전체의 유지와 통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나) 사회는 사회적 희소가치 배분을 둘러싸고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에 대립과 갈등이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갈등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간다.

① (가)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② (나)는 교육이 세대 간 계층 내 수평적 이동보다는 계층의 수직적 이동을 강화한다고 본다.

③ (가)는 사회화를 일상생활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타인의 반응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④ (나)는 사회 변동을 예외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며 사회가 집단 간 갈등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가)의 기능론과 (나)의 갈등론이 불평등, 교육, 사회화, 사회 변동을 각각 어떻게 설명하는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능론은 사회를 상호 의존하는 부분들이 전체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는 체계로 본다. 사회 불평등도 중요한 역할에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고 성취 동기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것으로 설명한다.
갈등론은 사회를 희소가치를 둘러싼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대립 관계로 본다. 불평등과 교육은 기존 지배 구조를 재생산하며, 집단 간 갈등은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된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일상생활의 상호 작용에서 타인의 반응과 의미 해석을 통해 자아와 행동 방식이 형성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가)는 기능론이다. 기능론은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높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② X — 틀린 표현은 '교육이 계층의 수직적 이동을 강화한다'이다. (나)의 갈등론은 교육이 지배 집단에 유리한 가치와 문화를 전달하여 기존 계층 구조를 재생산하고 계층의 수직 이동을 제약한다고 본다.
③ X — '일상생활의 상호 작용에서 타인의 반응에 따라 바람직한 행동을 내면화한다'는 설명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에 가깝다. (가)의 기능론은 사회화를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유지하게 하는 과정으로 본다.
④ X — 틀린 표현은 '사회 변동을 예외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으로 생각한다'이다. 이는 안정과 균형을 중시하는 기능론의 설명에 가깝다. (나)의 갈등론은 사회 변동을 집단 간 대립과 갈등에서 비롯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현상으로 본다.

오답 포인트

③은 '사회화'라는 공통 주제 때문에 기능론처럼 보이지만, '일상생활의 상호 작용'과 '타인의 반응'이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결정적 단서이다. ④는 '집단 간 갈등'이라는 갈등론의 표현에 '예외적·병리적 현상'이라는 기능론의 관점을 섞은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안정·통합·상호 의존·기능·차등 보상은 기능론, 지배와 피지배·불평등 재생산·갈등에 의한 변동은 갈등론, 일상적 상호 작용·의미 해석·타인의 반응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으로 판단한다. 한 선지에 서로 다른 관점의 핵심어가 섞여 있으면 각 표현을 나누어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기능론은 안정과 통합, 갈등론은 불평등과 변동,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일상적 의미 형성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표는 문화 이해의 태도를 (가)~(다)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질문	(가)	(나)	(다)
각 문화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존중하는가?	예	아니오	아니오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오	(a)	아니오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아니오	예	예

① (가)는 (다)보다 문화 공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② (a)의 답변이 “예”라면 (나)는 (가)보다 문화 동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③ (다)는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한다.

④ (가)가 극단화되면 ‘명예살인’과 같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화도 인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표의 세 판단 기준을 이용해 문화 이해의 태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각 문화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존중하는 (가)는 문화 상대주의이고,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나)는 문화 사대주의이므로 (a)는 ‘예’이다. 따라서 (다)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문화 상대주의인 (가)는 각 문화를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므로, 자기 문화만을 우월하게 보는 자문화 중심주의인 (다)보다 문화 공존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② O — (a)는 ‘예’이고 (나)는 문화 사대주의이다. 문화 사대주의는 다른 문화를 우월하게 여겨 자기 문화를 낮게 평가하므로, 문화 상대주의인 (가)보다 문화 동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③ X — 자문화 중심주의인 (다)는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가 아니다. 틀린 표현인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를 고치면, ‘자기 문화의 가치와 기준을 중심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한다’가 된다.

④ O — 문화 상대주의인 (가)를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모든 문화 관행을 그 사회의 맥락이라는 이유로 용인하여, 명예살인처럼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관행까지 인정할 우려가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문화 상대주의가 모든 문화를 무조건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문화의 맥락을 존중하되,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관행은 비판할 수 있다. 또한 ③의 '인류 보편적 가치'와 자문화 중심주의의 '자기 문화 기준'을 혼동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화 고유의 의미 존중'은 문화 상대주의, '다른 문화 우월·자기 문화 열등'은 문화 사대주의, '자기 문화 우월·자기 문화 기준으로 평가'는 자문화 중심주의로 연결한다. 문화 상대주의도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관행까지 무조건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암기 포인트

상대주의는 맥락 존중, 사대주의는 타문화 우월,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 우월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표는 A 사회와 B 사회의 세대 간 이동에 따른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 사회> (단위: %)

구분		부모의 계층			계
		상층	중층	하층	
자녀의 계층	상층	5	5	10	20
	중층	10	15	35	60
	하층	5	10	5	20
계		20	30	50	100

<B 사회> (단위: %)

구분		부모의 계층			계
		상층	중층	하층	
자녀의 계층	상층	10	6	4	20
	중층	3	8	4	15
	하층	7	46	12	65
계		20	60	20	100

<보기>

㉠ 세대 간 수직 이동 비율은 A 사회가 B 사회보다 낮다.

㉡ 자녀 세대에서는 A 사회가 B 사회보다 사회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이다.

㉢ A 사회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은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보다 2배 높다.

㉣ 부모의 계층 중에서 상층 지위가 대물림된 비율은 A 사회가 B 사회보다 낮다.

㉤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으로 고착화되는 현상은 A 사회가 B 사회보다 두드러진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세대 간 계층 이동표에서 대각선은 계층 대물림, 대각선 밖은 수직 이동을 뜻하며, 상승·하강 이동은 부모 계층과 자녀 계층의 높낮이를 비교하여 계산한다.

NoteBase

조건 정리

표의 각 수치는 전체 구성원을 100으로 보았을 때의 비율이다. 행은 자녀의 계층, 열은 부모의 계층이다. 같은 계층에 머문 경우는 대각선 칸이고, 자녀가 부모보다 높은 계층이면 상승 이동, 낮은 계층이면 하강 이동이다.

사용할 공식

수직 이동 비율 =100-대각선 합
상승 이동 비율 =자녀 계층이 부모 계층보다 높은 칸의 합
하강 이동 비율 =자녀 계층이 부모 계층보다 낮은 칸의 합
부모 상층의 상층 지위 대물림 비율 =부모·자녀 모두 상층인 비율부모 상층 전체 비율

같은 계층 여부는 대각선으로, 이동 방향은 행의 자녀 계층과 열의 부모 계층을 비교하여 판별하기 때문에 이 계산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 A 사회의 대각선 합은 5 + 15 + 5 = 25이므로 수직 이동 비율은 75%이다. B 사회의 대각선 합은 10 + 8 + 12 = 30이므로 수직 이동 비율은 70%이다. 따라서 A 사회가 B 사회보다 낮다는 ㉠은 틀리다. 올바르게는 A 사회가 B 사회보다 5%p 높다.
㉡ 자녀 세대의 계층 구성은 A 사회가 상층 20%, 중층 60%, 하층 20%이고, B 사회가 상층 20%, 중층 15%, 하층 65%이다. A 사회는 중층 비율이 높고 하층 비율이 낮은 다이아몬드형 구조이므로 사회 통합에 더 유리하다. 따라서 ㉡은 옳다.
㉢ A 사회의 상승 이동 비율은 5 + 10 + 35 = 50%이고, 하강 이동 비율은 10 + 5 + 10 = 25%이다. 50%는 25%의 2배이므로 ㉢은 옳다.
㉣ 부모가 상층인 사람 중 자녀도 상층인 비율은 A 사회가 5/20 = 25%, B 사회가 10/20 = 50%이다. 따라서 A 사회가 더 낮다는 ㉣은 옳다.
㉤ 전체 계층 대물림 비율은 대각선 합이므로 A 사회는 25%, B 사회는 30%이다. 따라서 계층 고착이 A 사회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은 틀리다. 올바르게는 B 사회에서 더 두드러진다.

선지 판단

① X — ㉠은 틀리고 ㉢이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 ㉢, ㉣이다.
② O — 옳은 진술인 ㉡, ㉢, ㉣을 모두 포함한다.
③ X — ㉤은 틀리고 ㉣이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 ㉢, ㉣이다.
④ X — ㉠과 ㉤은 틀리고 ㉡과 ㉢이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 ㉢, ㉣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은 전체 인구가 아니라 '부모가 상층인 사람'을 분모로 삼아야 한다. 또한 ㉠·㉤처럼 이동 또는 고착을 비교할 때에는 대각선 합과 대각선 밖의 합을 반대로 읽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행이 자녀, 열이 부모임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대각선 합에서 대물림 비율을 구하고, 대각선 밖의 칸을 상승과 하강으로 나누어 합산한다. 특정 부모 계층의 대물림 비율은 해당 부모 계층의 열 합을 분모로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대각선은 대물림, 대각선 밖은 이동이다. 조건부 대물림 비율의 분모는 해당 부모 계층 전체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인터넷 일탈 행동 사례에 대한 甲~丁의 대화 내용과 <보기>의 설명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현실 세계와는 다른 인터넷 상의 새로운 윤리가 정립되지 않아서 규범적 혼란이 이어지기 때문이야.
乙: 사람들이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을 비난해 왔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프로게이머가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로 손꼽히면서 인터넷 게임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
丙: 특정 연예인 SNS에 몰려가 욕설과 비방 댓글을 다는 악플러들과 인터넷 상에서 친하게 어울리며 댓글을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나도 아무렇지 않게 악플을 쓰게 돼.
丁: 인터넷 상에서 음악과 영상 콘텐츠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기만 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속과 처벌이 너무 미약해서야.
<보기>
㉠ 사회 통제 강화를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강조한다.
㉡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일탈 행동은 일탈적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고 본다.
㉣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에서 오는 아노미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① 甲-㉣
② 乙-㉡
③ 丙-㉢
④ 丁-㉠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일탈 이론의 핵심 원인을 사례 속 단서와 연결하고, 뒤르켐의 아노미와 머튼의 아노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뒤르켐의 아노미는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기존 규범이 약해지거나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무규범 상태이다.
머튼의 아노미는 사회가 강조하는 문화적 목표와 이를 합법적으로 달성할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이다.
낙인 이론은 행위 자체의 객관적 속성보다 사회적 반응과 규정에 의해 일탈이 성립한다고 본다.
차별 교제 이론은 일탈적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일탈의 기술과 태도를 학습한다고 본다.
사회 통제 이론은 사회적 유대나 통제가 약할수록 일탈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甲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윤리가 정립되지 않아 규범적 혼란이 생긴다고 보므로 뒤르켐의 아노미에 해당한다. ㉣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는 머튼의 아노미이므로 잘못 연결되었다. 올바르게는 甲을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무규범 상태'와 연결한다.
② O — 乙은 같은 인터넷 게임도 사회의 평가에 따라 비난의 대상에서 선호 직업으로 달리 규정된다고 본다. 이는 일탈을 정하는 고정적·객관적 규범이 없고 사회적 반응이 중요하다고 보는 낙인 이론의 ㉡과 연결된다.
③ O — 丙은 악플러들과 어울리고 댓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악플 행동을 익힌 사례이다. 일탈적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을 학습한다는 차별 교제 이론의 ㉢과 연결된다.
④ O — 丁은 불법 다운로드가 계속되는 원인을 미약한 단속과 처벌에서 찾는다. 일탈 억제를 위해 사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 연결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아노미'라는 말만 보고 甲과 ㉣을 연결하기 쉽다. 그러나 甲의 핵심은 새 규범의 미정립에 따른 무규범 상태이고, ㉣의 핵심은 목표와 합법적 수단의 괴리이므로 서로 다른 아노미 개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의 원인 단어를 먼저 찾는다. '규범 부재·규범 혼란'은 뒤르켐, '목표와 수단의 괴리'는 머튼, '사회적 규정·반응'은 낙인, '타인과의 접촉·학습'은 차별 교제, '유대·통제 약화'는 사회 통제 이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규범 혼란은 뒤르켐, 목표－수단 괴리는 머튼, 반응은 낙인, 교제는 학습, 통제 약화는 일탈이다.

NoteBase

문 19. 다음은 A~C 사회의 일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각각 보여준다. A~C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A~C 사회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A 사회: 甲은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한다. 기계화된 대량 생산 시스템이 도입된 작업 공정은 세분화되고 표준화되어 있다. 그는 쉴 새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 톱니처럼 컨베이어벨트의 조립 라인에서 단순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B 사회: 乙은 생산한 것을 대부분 스스로 소비하며, 일터와 가정, 일과 여가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루 중 일과 휴식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 리듬이나 신체 상황, 할 일의 양에 따라 스스로 노동 강도를 조절하면서 일한다. 또한 노동 시간은 자연의 주기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C 사회: 丙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든 인터넷을 통해 직장 동료 및 협력 업체와 교류하며 회사의 업무를 처리한다. 이처럼 화상 회의, 전자 결재, 전자 상거래, 원격근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업무 수행이 일상화됨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줄어들면서 사회 조직의 운영에서 유연성이 증대되고 있다.

① A 사회는 B 사회보다 업무의 표준화 정도가 높다.
② C 사회는 A 사회보다 관료제 조직 형태가 두드러진다.
③ C 사회는 A 사회보다 비대면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④ C 사회는 B 사회보다 서비스 및 지식 관련 산업의 종사자 비율이 높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일하는 방식에 나타난 특징을 통해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를 구분하고 각 사회의 조직 원리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는 기계화된 대량 생산과 분업·표준화가 중심인 산업 사회이다. B는 자연의 주기에 맞추어 생산하고 생산물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소비하는 농업 사회이다. C는 정보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줄고 유연한 업무가 확대된 정보 사회이다.
산업 사회는 표준화·관료제가, 농업 사회는 자급적 생산과 자연 주기 중심의 노동이, 정보 사회는 지식·정보 산업과 비대면 네트워크가 두드러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A는 산업 사회로, 세분화된 공정과 표준화된 대량 생산이 특징이다. B의 농업 사회보다 업무의 표준화 정도가 높다.
② X. 틀린 표현은 ‘C 사회는 A 사회보다 관료제 조직 형태가 두드러진다’이다. 관료제는 분업, 위계, 규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산업 사회 A에서 정보 사회 C보다 두드러진다. 올바르게는 ‘A 사회는 C 사회보다 관료제 조직 형태가 두드러진다’이다.
③ O. C는 정보 사회로, 인터넷·화상 회의·원격근무를 통한 비대면 상호작용이 A의 산업 사회보다 활발하다.
④ O. C의 정보 사회는 서비스업과 지식·정보 관련 산업의 비중이 크므로, 농업 중심의 B 사회보다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오답 포인트

②의 함정은 정보 사회의 복잡한 조직을 곧 관료제의 강화로 보는 데 있다. C에서는 네트워크형·수평적·유연한 조직이 확대되는 반면, 표준화와 위계에 기초한 관료제는 A의 산업 사회에서 더 두드러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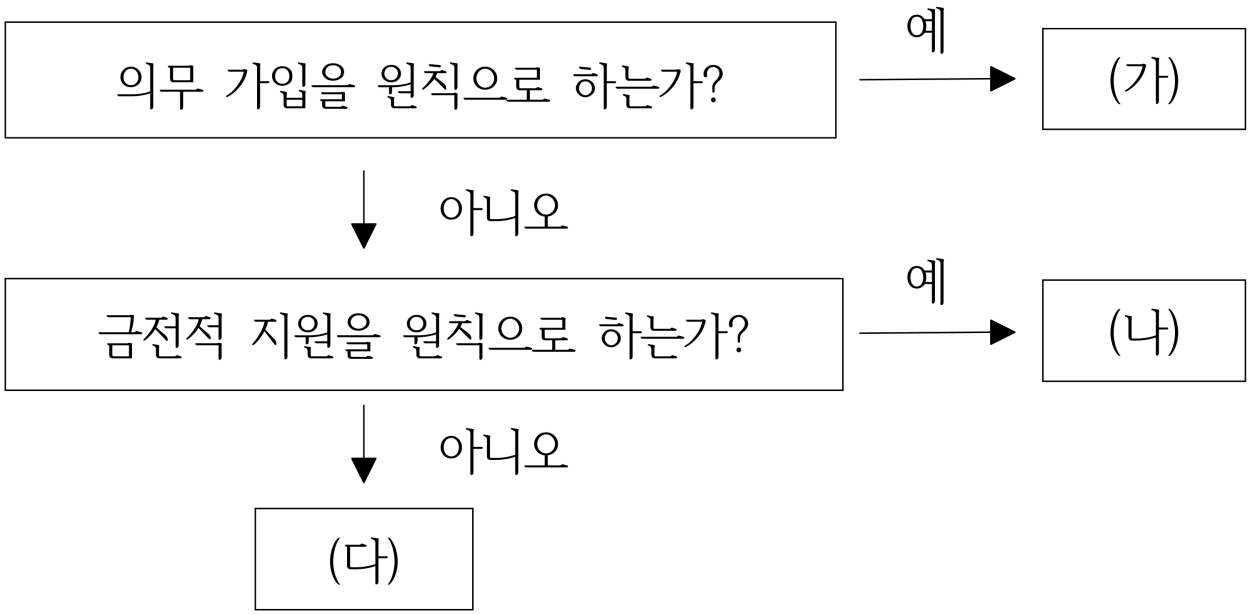
대량 생산·분업·표준화·관료제는 산업 사회, 자연 주기·자급적 생산은 농업 사회, 정보 통신 기술·비대면 상호작용·유연한 조직·지식 산업은 정보 사회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농업 사회는 자연과 자급, 산업 사회는 공장과 표준화, 정보 사회는 네트워크와 유연성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가)~(다)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세 가지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보기>

㉠ (가)는 (나)보다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작다.

㉡ (나)는 (다)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 (가)와 (나)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가)는 사전 예방, (나)는 사후 처방의 성격을 갖는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의무 가입 여부와 금전적 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사회 보험·공공 부조·사회 서비스를 구분하고, 각 제도의 대상 범위·비용 부담·기능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가) 사회 보험: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나) 공공 부조: 생활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조세를 재원으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며 사후 처방적 성격과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다) 사회 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재활·돌봄·정보 제공·시설 이용 등 비금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핵심 대비: 사회 보험은 의무 가입과 수혜자 부담, 공공 부조는 선별 지원과 국가 부담,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이 중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이 틀렸으므로 ㉠·㉡의 조합은 적절하지 않다. ㉠의 틀린 표현은 '(가)는 (나)보다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작다'이다. 실제로는 사회 보험인 (가)가 저소득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공공 부조 (나)보다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넓다. ㉡은 공공 부조가 사회 서비스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므로 옳다.
② X — ㉠과 ㉢이 모두 틀렸다. ㉠은 '(가)의 수혜 대상 범위가 (나)보다 넓다'로 고쳐야 한다. ㉢의 틀린 표현은 '(가)와 (나)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이다. 실제로는 사회 보험인 (가)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공 부조인 (나)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X — ㉡은 옳지만 ㉢이 틀렸으므로 ㉡·㉢의 조합은 적절하지 않다. ㉢은 '(가)는 수혜자 부담, (나)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과 ㉣이 모두 옳다. 공공 부조인 (나)는 사회 서비스인 (다)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또한 사회 보험인 (가)는 위험 발생 전에 대비하는 사전 예방, 공공 부조인 (나)는 빈곤이 발생한 뒤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후 처방의 성격을 갖는다.

오답 포인트

㉠은 '선별 지원을 하므로 공공 부조의 범위가 넓다'고 거꾸로 판단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공공 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선별하지만 사회 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회 보험의 범위가 더 넓다. ㉢은 사회 보험의 수혜자 부담 원칙을 공공 부조에도 잘못 확장한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의무 가입이면 사회 보험, 의무 가입이 아니면서 금전적 지원이면 공공 부조, 그 밖의 비금전적 지원이면 사회 서비스로 분류한다. 그다음 사회 보험은 수혜자 부담·사전 예방, 공공 부조는 국가 부담·사후 처방·큰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 보험은 의무 가입·보험료·사전 예방, 공공 부조는 조세·선별 지원·사후 처방,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이다.

NoteBase